

광주 이번엔 학교급식소 음식쓰레기 대란

86개 학교 수거 업체 폐업
50여개교는 다른 업체와 계약
30여개교 대책 없어 급식 차질
7월에도 수거 중단 사태
공공처리 방식 도입 시급

광주에서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란'이 불거졌다. 이번엔 학교 급식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쌓인 음식쓰레기로 인한 위생 탓에 학생들의 급식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7월 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시설의 화재로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한달 여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처리 방식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폐업 절차에 들어가면서 광주지역 음식점과 학교 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 230여 곳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체는 자신들이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해주는 민간자원화시설이 영입되지 못하면 받아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동반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이날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폐업을 결정한 수거 업체는 지난 5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을 맺은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6곳에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학교들은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제공에도 차질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각 학교들은 다른 업체들을 수소문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86개 학교 중 50여 곳은 다른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어 사태를 해결한 반면, 이를 제외한 30여 개교는 업체 측이 "우리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상

태다", "수거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화재로 인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거 중단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또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음식물 쓰레기 사태에 불안이 크다"면서 "이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최대 500t 정도로, 가정이나 소형 음식점 등 공공부문은 각 자치구에서 수거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또 대형음식점과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업체·기관은 10개 민간수거업체와 3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간 업체들이 넘쳐나는 스

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남과 전북, 충남 등 타 지역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 처리하는 형편이다.

만약 수거업체나 처리업체 중 단 한 곳이라도 폐업 또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엔 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벗어나 자치단체나 공기업이 직접 관리·경영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발생량의 60% 정도로,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태"라면서 "현재로서는 민간 수거·처리업체의 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북구서 차량 훼손 범죄 잇따라

강력 접촉제 뿌려...경찰 수사

광주에서 주차된 차량에 오염 물질 등을 뿌려 차량을 훼손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65)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본인의 구형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강력접촉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차량 앞부분과 유리창에 뿌려져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에 시멘트나 페인트로 추정되는 접촉 성분 물질이 뿌려진 채 발견됐다.

이 차량은 도색 등을 통해 수리비 7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접촉물질을 뿌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앞서 발생한 범죄와는 발생 장소나 범행 수법이 달라 연쇄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부인했다가 시인"

운전자 바뀌치기 의혹도 수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레퍼 장우준(19)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률 경찰정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가지 것을 고려해 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 난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명확히 운전자가 지목되고 피해자,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텐데 당시에는 혐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전자 바뀌치기) 행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는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정대협은 종북' 주장 지만원씨 징역형 집유 확정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한다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극우 논객 지만원(78)씨에게 징역형의 집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극우 논객 이상진(77)씨도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5년 5~12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조합원들에 금품 뿌린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조합원을 접촉해 현금을 건넸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해선 13일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r



"사랑의 송편 나누야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자들이 9일 광주시 임동 광주봉사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송편을 담고 있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745명 정규직 전환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에 따라 외주직원 745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로가 외주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생긴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다. 도로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수납원 외에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에 대한 직접 고용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 요금수납원 6514명 중 5094명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현재 자회사에 근무 중이고 1420명은 자회사 전환해 반대하고 있다. 이중 1116명은 1·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1·2심을 진행 중인 수납원에 게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로공은 소송마다 사례가 달라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남지부 등은 도로공이 현행법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설 연휴 절도범의 최후...추석 앞두고 붙잡혀 철창행



○...설 연휴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20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히는 바람에 결국 철창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임모(26)씨는 설 명절 연휴기간이던 지난 2월 2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PC방에서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지난 6월 28일 새벽 1시께

화정동의 한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20만원 등 금품을 훔쳐다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지난해 7월께 건조물점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